

대기업에도 뼈아픈 '日 경제공습'... 절반이 '경영타격'

한경연 매출액 1000대 기업 설문

매출 2.8%, 영업이익 1.9% 줄어
일부기업은 적자 전환 전망도
국제 분업체계·가치사슬 붕괴
첨단소재·장비 경쟁력 높여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제외 등 일본의 수출 규제로 국내 대기업 2곳 중 1곳이 경영에 타격받을 전망이다.

매출과 영업이익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대기업들은 일본의 이번 경제 공습으로 적자 전환 가능성이 우려된다.

앞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일본 제품 수입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긴급 설문 조사를 실시해 내놓은 결과 응답기업의 52%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해 준비를 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중견기업에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피해 사례 접수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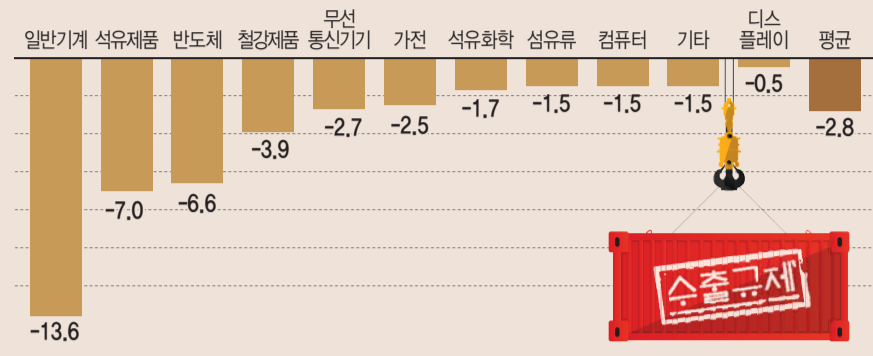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시장조사 전문가인 모노리서치에 의뢰, 매출액 1000대 기업을 대상(893곳 중 153곳 응답)으로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등 수출규제 영향을 조사해 19일 내놓은 결과 51.6%가 '경영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다. '영향 없음'은 48.4%였다.

특히 일반기계 -13.6%, 석유제품 -7%, 반도체 -6.6% 등 매출이 급감하고, 산업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평균 2.8% 하락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수출 규제가 매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기업만 별도 집계하면 매출액은 -5.7%로 감소율이 두 배로 늘어난다.

영업이익은 평균 1.9%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일반기계(-7.9%), 석유제품(-5.4%), 반도체(-5.1%), 디스플레이(-2.4%) 등에서 영업이익율이 눈에 띄게 줄어들 전망했다.

한경연 유환익 상무는 "작년 1000대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업종별 매출액 영향 단위: %



기업의 평균 영업이익율이 5.3%임을 감안하면 영업이익이 1.9% 감소할 경우 일부 기업은 적자전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기업들은 '대체 수입선 확보'가 자체적으로도, 정책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이다.

단기 대응으로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53.7%)'가 1순위로, '대체 부품소재 물색'(15.9%), '일시적 사업축소·건축 경영'(8.5%), '생산품목 등 제품 포트폴리오 변경'(8.0%) 등이 뒤를 이었다.

길게 봐도 '국내외 대체 수입선 확보'(28.8%)가 가장 많았고 '부품소재 국산화'(25.0%)도 그 다음으로 높았다.

정부 정책지원 과제 역시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30.9%)을 가장 많이 거론했다. 이어 '부품소재 국산화 재정지원'(23.9%), '피해업종 세제 혜택'(23.0%), '화학물질·부품소재 규제 완화'(16.6%)였다.

한·일 경제갈등 해결 방안으로는 '한·일 정부 간 외교적 타협'(40.5%)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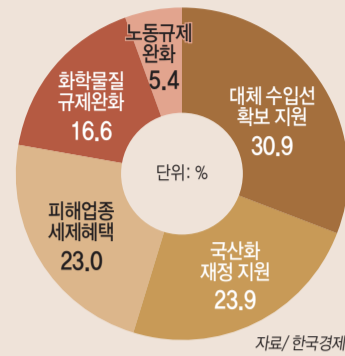
앞서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에서 중소기업들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분야로 '일본과의 외교적 해결 및 국제공조 강화'(44.7%)를 1순위로 꼽았다.

이와 별도로 중견기업들을 회원사로 둔 중견기업연합회는 현재 일본 수출 규제 피해 접수 센터를 마련, 사례 발굴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번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 부품, 장비 등의 국산화를 넘어서 이를 중국에 공급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부적으로 작성한 '새로운 통상질서와 글로벌 산업지도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첨단소재와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기

정책지원 우선순위



려 하고 있으며, 중국은 자국내, 일본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지역, 독일은 유럽연합(EU) 지역에 권역별 가치사슬을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로써 지난 30년간 전세계에 걸쳐 구축돼 있던 GVC 체계가 북미, 중국, 유럽, 아세안의 4개 권역으로 빠르게 재구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중 무역분쟁 속에 중국의 부품·소재 산업 자급률 향상을 한국에 위기가 기회로 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은 우리나라의 대(對)중국 주력 수출제품인 철강, 석유화학에서 이미 자급 생산체제를 갖췄다고 평가되며, 이제는 반도체의 자급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그동안 중국에 중간재를 공급하던 한국, 일본, 대만과 중국 간의 분업 협력구조가 깨지면서 무한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與 특위의 말잔치 "대-중기 상생을"

일본 경제보복으로 국내 기업 매출·영업이익 감소가 예상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장기적 부품·소재·장비산업 양성으로 (정책을) 바꿔나가야 한다"며 대응 기조를 고수했다.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 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특위 첫 전체회의에서 "단순히 일본 정부의 부당 조치에 대한 반격으로만 대응하지 않고,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립의 원년으로 삼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권과 장관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뀌는 단기적 시각을 벗어나야 한다는 게 정 위원장 설명이다.

정 위원장은 그러면서 "그동안 소재·부품·장비 산업 체질 개선에 대한 국민 인식은 있는데 실천은 못 따라가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을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부품 산업 양성은 하루 만에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다양한 기업과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가 구성돼야 제조업 혁신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의원(오른쪽)이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재·부품·장비산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특위 구성원이 (현장에서) 듣고 온 목소리는 양국 갈등이 현 상황에서 더 악화되거나 민간영역으로 확대되선 안 된다는 것이었다"라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불안감 해소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아베 다소 일본 총리를 향해선 "협력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한다"며 "(한국이) 먼저 용기를 내 대화 협력을 제의했고, 이제 그 화답을 들 차례"라고 말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

생활 속 아이디어
창업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생활혁신형 창업”이란?
소비 트렌드의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을 겨냥하여 생활과 밀접한 아이템에 참신한 아이디어를 적용한 새로운 형태의 창업을 말합니다.

”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신청안내

신청기간 2019.3.29. ~ 연내(예산 소진시까지)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로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

지원내용 선정 후 멘토링 지원(회당 4시간, 최대 2회) 및 정책자금 최대 2천만원 지원

신청방법 온라인(idea.sbiz.or.kr)으로 신청

문의처 국번없이 1357

* 자세한 사항은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홈페이지(idea.sbiz.or.kr) 내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세요.